

# 규제혁신 예시사례

## 사례 1 |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

■ (기존) 우리나라 입국 시에는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없어도 기내에서 여권과 필기구를 찾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, 세관검사 대기줄에서 신고서를 제출

⇒ (개선)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'휴대품 신고서' 작성·제출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국 가능(2023년 5월~). 과세대상 물품\* 신고 및 세금 납부는 편리하게 모바일 앱으로 가능(2023년 7월~). 매년 4,300만 명의 여행자에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

\* ▲면세범위(미화 \$800 이하 물품, 술 2병 등) 초과 물품 ▲1만달러 초과 현금수표 등  
※ 「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」 개정(2023년 5월)

## 사례 2 | 無라벨 생수도 편의점, 자동판매기 등에서 날개로 구입

■ (기존) 無라벨 먹는샘물(생수)는 포장겉면에 제품정보\* 의무표시를 전제로 '묶음 판매'만 가능(편의점, 자동판매기 등에서의 '날개 판매'는 불가)

⇒ (개선) 개별 용기에 QR코드를 활용한 제품정보 표시를 허용, '묶음판매'와 함께 無라벨 먹는샘물도 '날개 판매'가 가능토록 개선

※ 「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」 개정(2022년 12월)

## 사례 3 | 자가치료용 해외의약품 수입 시 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

■ (기존) 희귀질환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대부분 장기적·주기적으로 반복됨에도 '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서' 발급을 위해 매번 진단서 제출 필요

⇒ (개선) 주기적으로 자가치료용 해외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처방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\* 개정(2024년 8월)

※ 「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(식약처 고시)」

## 사례 4 |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

■ (기존)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(SSM)는 0~10시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(공휴일 원칙, 지자체에서 평일로 변경 가능)을 실시하며,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불허

⇒ (개선 중)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에 온라인배송 허용(대형마트도 새벽배송 가능)

## 사례 5

###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·손자녀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허용

- (기존)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 노인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. 그리고 입주자 및 배우자가 부양하는 자녀·손자녀는 18세까지만 거주 가능. 19세를 넘으면 90일 이내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
- ⇒ (개선) 자녀·손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거주 가능. 비장애 자녀·손자녀의 경우 24세까지 거주 가능
- ※ 「노인복지법」 개정(2024년 1월)

## 사례 6

###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 허용

- (기존) 모든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이동주유가 금지\*되어, 재난현장 소방차량도 연료가 소진된 경우 주유소에서 주유한 후 다시 현장으로 복귀
- \* 안전사고 및 불법석유 유통방지를 위해 이동주유차량(탱크로리) 통한 연료주입 제한
- ⇒ (개선)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주유차량을 통한 현장 주유 가능토록 허용
- ※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(2024년 5월)
-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 개정(2024년 8월)

## 사례 7

###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

- (기존) ①전통시장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'골목형 상점가의 밀집기준(2천㎡, 점포 30개 이상)을 지자체가 변경하려는 경우, 중기부 협의 필요
- ②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(5년) 만료 이후 사용 제한
- ⇒ (개선) ①지자체에서 밀집기준 변경을 위해 중기부에 협의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수용 조치하는 등 지자체 자율시행 원칙으로 변경(2024년 1월~)
- ②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(5년) 이후에도 사용 허용(2023년 11월~)

## 사례 8

###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

- (기존) 건강기능식품의 거래는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에 한해 허용하고, 개인 간 판매(중고거래)를 금지
- ⇒ (개선)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거래는 허용하되, 중고거래 플랫폼 중 개인 간 거래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업자(당근마켓, 번개장터)를 통해 1인당 연간 10회 또는 누적 30만원 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1년간 시범사업 실시 (2024년 5월~)

## 사례 9

### 섬 지역 냉장고·에어컨용 냉매가스 운송규제 개선

- (기존) 여객선으로 냉장고·에어컨용 냉매·용접 가스를 운송할 수 없어 대다수 섬지역 (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전국 약 242곳)에서 냉장고·에어컨의 신규 설치 및 수리가 어려운 상황
- ⇒ (개선) 선장 허가하에 여객선을 통한 냉매·용접용 가스 운반 허용, 섬 지역도 냉장고·에어컨의 설치·수리가 가능해져 섬 주민들의 불편 해소
- ※ 「위험물 선박운송 기준」 개정(2023년 6월)

## 사례 10

###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

- (기존) ①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비자(E-9)로 국내에 입국하는데 이때 사업장별 고용 한도, 허가 업종·기업 제한\*으로 중소기업은 인력난 호소
  - \* 택배 상하차, 임업, 광업, 호텔콘도업 등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불가
- ②특정 현장은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가 채용이 시급한 상황에도,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전 14일(농·축산·어업은 7일) 이상 내국인 근로자 채용 행위가 필요. 사업장 인력 공백 발생
- ⇒ (개선) ①외국인 근로자(E-9) 도입 규모, 사업장별 고용한도·업종·기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
  - (전체규모) 역대 최대규모 도입 인원(69천 명(22년)→120천 명(23년)→165천명(24년))
  - (사업장별)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확대
  - (기업확대) 지역 인구 소멸로 구인난이 심각한 비수도권에 본사가 소재하는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력(E-9) 허용
  - (업종확대)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①택배업 및 공항지상조업(상·하차 직종), ②임업, ③광업, ④호텔·콘도업(건물청소원 및 주방보조원 직종, 시범) ⑤한식·외국식 음식점업(주방 보조원 직종, 시범)으로 확대
- ② 모든 업종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사업장 인력공백 최소화
- ※ 고용부,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(2023년~2024년), 「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」 개정(2024년 1월)

## 사례 11

### 에너지바우처, 집배원이 노인·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

- (기존)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냉·난방연료 구입비용 바우처는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·장애인은 바우처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
- ⇒ (개선) 집배원이 바우처 미수령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바우처와 제도안내문을 배송하고 바우처 이용 실태조사도 하는 새로운 사업추진 방식 도입(에너지 바우처 미수령 1,246가구 중 867가구에 바우처를 전달)

## 사례 1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온라인 확인검사 제도 도입

- (기존)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차량 상태 확인이 필요. 기존 **현장방문 확인 검사 방식**의 경우 지역별로 검사업체·방식이 달라 비용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고, **도서·산간 지역**의 경우 **차량 이동 제한**으로 검사를 받는 데 불편
- ⇒ (개선) **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\*** 도입으로 확인검사 수수료 절감, 도서·산간지역 검사 편의성 개선
- \* (검사방법) 차주가 사진 5매(전·후·좌·우·차대일련번호), 동영상(2분 내)을 온라인 전산 업로드 → 판독 및 결과 통보(자동차환경협회)
- ※ **조기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 확인시스템 구축(2024년 2월)**

## 사례 13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 연장

- (기존)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 **3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**
- ⇒ (개선)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**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**,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
- 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 개정(2024년 2월)

## 사례 14 신규화학물질 제조·수입 업자의 등록 기준 완화

- (기존) 최근 신기술·신산업이 고도화·대규모화되며 화학물질 수요 및 취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, 우리나라에서는 **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제조·수입 하려는 자**는 제조 또는 수입 전 **환경부장관에게 등록**이 필요. 이로 인해 신기술 개발, 사업확장 등 산업경쟁에 현저한 부담 발생(예: 반도체 수증냉각물질 개발 등)
- ⇒ (개선) 유럽연합(EU)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에 맞춰 **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t이상으로 완화**, 반도체·전자 등 첨단업종 기업의 등록비용 절감과 제품 조기 출시 등 기대
- ※ 「화학물질관리법」,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4년 2월)

## 사례 15 재난상황,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인접지역의 소방헬기 출동

- (기존) 시도 경계 지역에서 대형재난이 아닌 **일반적인 사고 상황**이 발생하여 소방헬기 출동이 필요한 경우, 다른 시도의 인근 지역에 소방헬기가 있더라도 원거리에 있는 관할 기관의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상황 발생
- ⇒ (개선) 시도 경계와 관계없이 사고현장과 **가장 가까운 소방헬기**가 출동하는 '소방헬기 국가 통합 출동 시범운영(2023년 4월 /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 12개 시도)

## 사례 16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제한 완화

- (기존) 한도제한 계좌\*의 1일 거래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\*\*.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적은 전업주부·청년·고령층 등은 거래한도가 낮고, 제한 해제도 어려워 금융거래에 불편 발생

\* 금융거래 목적 확인되지 않아 이체와 출금 한도가 제한된 계좌

\*\* 앱·인터넷뱅킹·ATM 30만원, 창구거래 100만원

- ⇒ (개선)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금융거래 한도를 상향(앱·인터넷뱅킹·ATM 30만원 → 100만원, 창구거래 100만원 → 300만원). 또한 한도제한 해제 편리성 제고를 위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를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확하게 안내.

※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개정(2024년 2월)

## 사례 17 비알코올·무알코올 음료 유통 완화

- (기존)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비알코올·무알코올 음료\*를 취급할 수 없어 식당 등에 유통 불가

\* 비알코올 음료 : 알코올이 1% 미만 함유된 음료, 무알코올 음료 :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음료

- ⇒ (개선)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코올·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. 식당 등에서 소비자의 비알코올·무알코올 음료 구입 편의성 증가

※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주세사무처리규정」 개정(2024년 5월)

## 사례 18 장애인 가족 돌봄급여 제공 범위 확대

- (기존) 장애인에 대한 가족 돌봄(활동보조·방문목욕 등)은 예외적인 경우\*에만 급여 지급

\* 도서산간 거주, 천재지변, 감염병 환자 등 사유에 해당하면서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 시에만 급여 지급(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제 21조)

- ⇒ (개선) 예외 사유를 '도서산간, 천재지변, 감염병 환자' 등에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'최중증 발달장애인, 희귀질환자(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)'로 확대(2024년 1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)

※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2024년 5월)

## 사례 19 전기추진 수상레저기구를 제도권 내 수용하여 레저산업 활성화

- (기존) 수상레저기구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나, 현 검사 기준은 내연 기관 중심의 내용으로 전기추진 설비에 관한 기준이 없어 안전 검사 불가

- ⇒ (개선) 전기추진 수상레저기구관련 규정(△전기추진설비 등 동력장치 △비상차단·소화기비치 등 안전장치)\*을 마련하여 안전한 운항 및 수상레저 산업 활성화 도모

※ 「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」 제정(2024년 3월)

## 사례 20 AI 조난신호 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안전 골든타임 확보

- (기존) 바다의 구조신호("물에 빠졌어요! MAYDAY" 등)를 사람의 청력에 의존하여 청취. 짧은 시간에 여러 곳에서 다량의 구조신호가 발생할 경우 신호 청취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
  - \* (SOLAS 협약) 해양 구조기관, 공용통신망(VHF 16번/156.8Mhz)으로 구조 신호 의무 청취
- ⇒ (개선 중) AI가 인지하여 구조기관에 자동 전파하는 '구조신호 자동 식별 시스템' 개발, 구조신호를 빠르고 정확하게 구조기관에 전달(전달 과정 단축, 7단계 →4단계)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(시스템 상용화 위한 예산 확보 중)
  - ※ 해경청, 국유 특허 등록(2024년 1월), 전 세계 157개국 우선 출원권 확보(2024년 7월)

## 사례 21 115년 묵은 어선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 추진

- (기존) 어선검사증서, 특별검사증서 등 9종의 검사증서\*가 115년간 종이 형태로 발급·보관되며, 어업인 관리 불편 및 손상·분실로 인한 재발급에 따른 행정력 낭비 초래
  - \* 어선검사증서, 어선특별검사증서, 임시항행검사증서, 건조검사증서, 예비검사증서, 별도건조검사증서, 검정증서, 건조(제조·정비)확인증, 제한하중등확인증
- ⇒ (개선) 국민 편의성 제고 및 행정 소요시간 단축을 위하여 검사증서(9종) 발급을 비대면·전자적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원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(연간 약 30억원 절감)
  - ※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개정(2023년 12월) 및 「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형태의 증명 발급에 관한 고시」 제정·시행(2024년 6월)

## 사례 22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

- (기존) 도서·공연비,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, 신문구독료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\*에 한정
  - \* (적용대상)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% 이상인 경우
- ⇒ (개선) 신용카드 등으로 영화상영권 입장권(영화표)을 구매하는 경우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영화 관람 비용 부담 완화(단, 식음료 및 기념품 구매비용은 제외)
  - 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(2023년 7월~)

## 사례 23 해외직구 모바일 관세납부·환급시스템 구축

- (기존)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에 직접 관세를 납부. 반품 후 환급 신청시 세관 직접 방문 또는 PC에서 신청
- ⇒ (개선) 모바일을 통해 언제, 어디서나 세금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'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'(2023년 9월)과 모바일로 환급을 신청 확인할 수 있는 '모바일 환급 시스템'(2023년 3월) 구축

## 사례 24

### 온라인 도매시장, 농·수산물 거래품목 확대 및 가입요건 완화

- (기존)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(2023년 10월~2025년 10월)를 통해 농산물 온라인도매 시장을 개설·운영 중이나, 거래품목은 '청과류, 양곡류, 축산물'에 한정되고 판매자 가입요건은 전년도 거래규모 50억원 이상 업체로 규정
- ⇒ (개선) 거래 가능 품목을 확대(청과류, 양곡류, 축산물 + 수산물)와 함께 명칭도 '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'으로 변경, 판매자 가입요건도 완화(전년도 거래 규모 50억원 이상 → 20억원 이상)
- ※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계획 변경 및 「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」 개정 완료(2024년 5월)

## 사례 25

###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사용기한 확대

- (기존)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는 '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(200만원\*)'의 사용 기한이 1년에 한정  
\*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
- ⇒ (개선) '첫 만남 이용권' 바우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연장\*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개선 및 미사용 바우처 최소화
- ※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사용기한 연장 적용

## 사례 26

### 귀어인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양식장 임대제 최초 도입

- (기존)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, 짧은 시간 내에 어촌 공동체 유대 형성이 어렵고,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정착에 한계
- ⇒ (개선) 양식업의 높은 초기투자비용이 부담인 점을 감안하여, 귀어·귀촌을 보다 손쉽게 하고 양식업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 도입
- ※ 「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」 개정(2023년 6월)

## 사례 27

### 자녀의 결석 신고와 증빙자료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

- (기존) 학부모가 직접 작성한 결석 신고서(결석계)에 증빙 자료(진료 확인서 등)를 첨부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담임 교사가 이를 확인하고 수기 결재 후 보관
- ⇒ (개선) 2024년 9월부터 '나이스(NEIS) 학부모 서비스'를 통해 초·중·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결석 신고 및 증빙 자료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
- ※ 온라인 결석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서비스 개통(2024년 9월)

## 사례 28

### 화장품의 전자적 정보제공(e-라벨) 시범사업

- (기존) 「화장품법」 제10조는 제품 명칭, 내용물 등 다양한 정보를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규정함. 작은 글씨로 많은 정보가 표기되면서 소비자가 화장품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불편함이 발생
- ⇒ (개선) 화장품에는 제품의 핵심정보만 확대하여 기재하고 그 외 다른 정보는 전자 라벨(e-라벨)로 제공. 소비자가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, 포장재 사용량도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과 함께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.
- ※ 2024년 9월 현재 6개사 19개 제품 참여 중이며(2023년 3월~2025년 2월, 필요시 1년 연장), 시범사업 후 화장품법 개정 추진

## 사례 29

### 대체연료유 발굴을 통한 해양환경 개선

- (기존) 멸치어선의 기존 연료유(중유)는 황함유량(0.26%)이 높아 특정 해역 내 사용이 제한되어 경유로 대체하였지만, 비용 증가에 따른 어민소득 감소와 대기 오염이 증가
- ⇒ (개선) 기존 연료유 대비 황함유량이 낮고 열효율이 높은 대체 연료유의 발굴(부생 연료유 2호 'C9')과 멸치어선의 사용허가로 해양환경 개선과 어민소득 증대에도 기여
- ※ 「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」 개정(2023년 8월)

※ 추가 사항은 아래 인터넷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▶ 규제정보포털([www.better.go.kr](http://www.better.go.kr))
- ▶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 홈페이지(<https://foryou.better.go.kr>)
- ▶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블로그(<https://blog.naver.com/koreareg>)